2021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Ⅰ. 총 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0. 10. 30.

○ 회 부 일 : 2020 11. 2.

○ 의안번호 : 2045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 2021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3억 5,190만원, 정무부시장실은 1억 9,780만원임.

<표-1> 2021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시장비서실	371,300	351,900	△19,400	5.22
정무부시장실	197,800	197,800	-	-

○ 2021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장비서실**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임.

- **정무부시장실**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임.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가. 시장비서실

○ 2021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업무추진비**[1]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1,940만원 감액된 3억 5,190만원으로 편성되었음(표-2).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억 8,71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만원 증액되었음.

<표-2> 2021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 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371,300	351,900	△19,400	5.2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60,000	△20,000	25.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87,100	-	-
시 장	277,200	277,200	-	-
비 서 실 장 (2 급)	9,900	9,90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800	600	14.28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그 성격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전년도(8,0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집행부는 시장 권한대행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2021년 보궐선거로 취임하는 시장 임기가 4월부터 시작해 3개월치를 삭감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행정안전부 2020.7. 이하 「업무처리요령」)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편성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업무처리요령」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만 제시되어 있어 시장권한대행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유권해석 의뢰 결과 시책업무추진비도 집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음.

- 한편 2016년까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3] 통보(2015.4.23.)에 따라, 부적절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43억원을 2017년부터 5년간 분할해 매년 8억 6,000만원씩 감액 편성해오고 있으며, 시장비서실은 이에 따라 연 2천만원 정도를 삭감해 편성하고 있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4]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의 경우 2억 7,720만원, 시장 비서실장(2급)의 경우 99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18년부터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음.[5]

---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주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격려·지원, 유관기관 협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는 경비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p.56).

3) 2010~2014년 서울시가 본청 4급 과장과 5급 팀장에게 각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부정적한 집행으로 판단했음.

4)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소속 직원 격려·지원, 유관기관 협조, 지역 홍보, 이재민· 소외계층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예산 편성 목적과 경비 집행 성격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

○ **부서운영업무추진비**[6]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23명, 전문임기제 3명을 합한 26명으로(2020.10.31.기준) 월 40만원씩 총 480만원으로 편성되었음(표-3).

- 정원 23명이 아니라 임기제 3명을 포함한 26명의 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제시된 단서 조항에 따라 정원 외 인력인 임기제 직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표-3> 2021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

구 분	기준액	비 고
정원 5명 이하 실·과	**월 100,000원**	▶ 정무부시장실(정원 5명)
정원 10명 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명 이하 실·과	**월 250,000원**	▶ 정무수석실(정원 11명)
정원 20명 이하 실·과	월 300,000원	
정원 25명 이하 실·과	**월 350,000원**	▶ 시장비서실(정원 22명)
정원 30명 이하 실·과	월 400,000원	
정원 31명 이상 1명 초과 시	5,000원 추가	

자료: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각 부서 정원은 2020년 10월 말 기준임.

○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2018년 67.4%, 2019년 98.8%, 2020년 10월 말 기준 63.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 98.0%, 2019년 92.0%, 2020년 10월 말 기준 7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100.0%, 2020년 10월 말 기준 73.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표-4).

---

5)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액한도를 최근 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24로 산정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서울특별시 총액한도액은 44억 1,568만원임.

6)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시·도의 경우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됨(「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p.58).

<표-4>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20.10.31. 기준, 단위 :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8	80,000	53,884	26,116	67.36%
	2019	80,000	79,060	940	98.83%
	2020.10.	80,000	50,520	29,480	63.1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8	287,100	281,353	5,747	98.00%
	2019	287,100	264,249	22,851	92.04%
	2020.10.	287,100	201,673	85,427	70.2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8	4,200	4,200	-	100%
	2019	3,600	3,600	-	100%
	2020.10.	4,200	3,076	1,124	73.24%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20년 8월부터 권한대행 사용분 반영

○ 시장비서실의 경우 그동안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과다 불용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아왔고 그에 따라 2019년에는 90%를 상회하는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2020년 시장 궐위로 인해 다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시장권한대행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속 집행할 수 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규정과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률이 각각 37%, 30%와 같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시장권한대행에게 요구되는 시장 업무의 연속성, 즉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해 기대되는 원활한 조직운영, 효과적인 홍보 및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등의 활동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건강·복지 강화, 부동산 안정 대책 마련, 광화문 광장 재조성, 지방자치법 개정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업들이 많고 중차대한 만큼 시장권한대행이 시정 철학과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정무부시장실

○ 2021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1억 9,780만원으로 편성되었음(표-5).

<표-5> 2021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197,800	197,8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93,600	-	-
정무부시장	193,600	193,60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	-
정무부시장실	1,200	1,200	-	-
정무수석실	3,000	3,000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음.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정원수별 기준액(표-3)에 따라, 정무부시장실의 경우(2020.10.31. 기준 정원 5명)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정무수석실의 경우(2019.10.31. 기준 정원 11명) 월 25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한편,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2018년 100%에 근접하게, 2019년 100% 전액 집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10월 말 기준 74.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8년 100%에 근접하게, 2019년 100% 전액 집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10월 말 기준 6.7%의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표-6).

<표-6>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20.10.31. 기준, 단위 :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8	193,600	193,534	66	99.97
	2019	193,600	193,768	-	100
	2020.10.	**193,600**	**144,703**	**48,897**	**74.7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8	4,200	4,192	8	99.81
	2019	4,200	4,215	-	100
	2020.10.	**4,200**	**283**	**3,917**	**6.74**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유관기관 협조, 지역 홍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그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시정 철학과 주요 시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 전문가와 시민, 시 공무원 등과의 의견 교환, 공감대 형성,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단 한 건(28만원)에 불과한 것은 정무부시장 교체(2020.7.1. 취임)와 시장 궐위에 따른 직원 채용의 어려움으로 정무부시장실 현원이 3명(정원 16명)에 불과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경비 집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계획적,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다. 예산안·결산 중복 심사 문제

○ 현재 시장비서실은 행정국(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정무부시장실은 시민소통기획관(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에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 두 실의 업무추진비 역시 각각 행정국과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실의 경우 운영위원회 예산안·결산 예비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행정국-시장비서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시민소통기획관-정무부시장실) 심사가 중복되고 있음.

○ 또한 정무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그 지원기관인 시민소통기획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20.9.30. 기준 1,147만원)를 포함시킨 것은[7] 부서별, 사업별 예산 편성과 결산에 혼란을 야기하며 부당한 경비 집행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음.

○ 예·결산 심사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며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은 업무 지원 부서(행정국,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분리·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 2020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별도 제출자료 공통 5번.